

# 자동차 업종 원-하청<sup>1)</sup>간 불공정 거래 개선 투쟁에 대하여

오 세 용(경주지역노동조합협의회<sup>2)</sup> 정책실장)

95년 11월 4일 정식 출범한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는 95년에 이어 96년도에도 자동차 업종 차원의 사회개혁투쟁 과제로서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개선 투쟁'을 주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하청 자동차부품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투쟁'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투쟁의 제기 및 전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문제가 민주노조 진영에서 처음으로 투쟁 과제로 공식 제기된 것은 95년 투쟁을 준비하던 94년 12월 중순부터였다. 당시 자총련(준)에서는 민주노총 준비위 차원에서 제기한 사회개혁투쟁과 함께,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을 주요한 사회개혁 요구로 설정하게 된다. 이후 자총련(준)은 95년 2월 22일 '자동차 산업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하

---

1) 하청이라는 말은 원청(원청자본 및 원청노동자)의 입장에서 쓰여지는 용어로, 실제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하청이라 부르지 않고, 부품업체노동자, 협력업체노동자라 부르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이 하청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경우, 이 재하청노동자들을 부를 때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하청'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2) 경주지역노동조합협의회는 8개 노조 2,80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조직으로, 8개 노조 전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로 이루어져 있다.

청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투쟁 이후 자총련(준)은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개선 투쟁’의 성과로, ① 완성차 부품 노조간의 상호 신뢰 강화에 도움을 주었고, ② 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문제 제기와 여론화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③ 이후 자동차 노조 전체 차원의 요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그 한계로서는, ① 부품 노조의 경우 투쟁 대상이 완성차 회사라는 점에서 투쟁 동력이 실리기 어려웠다는 점, ② 현수막 달기 등 공동 실천에 많은 노조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③ 투쟁 과정을 전체 조합원이 공유하고 공동의 실천을 면밀하게 조직하는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하청 노동자들일진대, 왜 하청 부품업체 노동조합에서는 95년 투쟁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문제가 중심적 요구로 제기되지도 않았고, 투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앞의 평가(안)에서는 투쟁 대상이 완성차 회사라는 점에서 투쟁 동력이 실리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 문제는 이후 불공정 거래 개선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했을 때 주요하게 판단되어야 할 점이기도 정리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하청 자동차부품 노동조합과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개선 투쟁

먼저 하청 노동조합에서 임·단투 시기에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를 제기했을 경우를 상상해 보자. 요구를 제기했을 때 가장 반기는 쪽은 불행하게도 조합원들이 아니라, 바로 하청 자본측이 될 것이다. “그래, 노동조합에서 회사의 어려운 점을 먼저 알아주는구나! 납품 단가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심지어 매년 인하되고, 대금 결제가 늦어짐으로써 회사가 어려운데, 그래서 회사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이 같은 어려움으로 지불 능력이 없어 안타까운데, 노조에서 회사의 어려움을 알아주니 반갑기 그지없구나! 회사를 생각해 주는 노동조합 최고!” 이같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다. 아예 임·단투는 물 건너가 버리게 될 것이 쉽상이다. 이러한 현실적 요인이 하청 노동조합에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을 요구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다.

다음으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투쟁 대상은 원청자본이 된다. 그렇다면 하청 노조에서 임·단투시기 하청 자본에게 요구안을 제출했

다는 것은 하청 노사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된다. 만약 하청 자본에 대해 투쟁을 같이할 수 있는 동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임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후에도 하청 노동조합에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청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원-하청 관계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되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 3. 원-하청 관계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피해 - 경주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경주 지역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그 총수는 100여개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이 5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만 겨우 16군데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주 지역에서는 95년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난 내용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는, 원청 자본의 하청 노조에 가해지는 부당한 지배, 개입, 간섭 행위

둘째는, 원청 자본의 하청 자본측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행태로 말미암아 하청 노조 및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피해

셋째는, 원청 노동자로부터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행위들이었다.

#### (1) 원청자본의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 간섭 행위

##### ① 하청업체 노동조합 대표자 출두(?) 요구

매년 임·단투 직전 혹은 직후가 되면 원청자본 측은 하청업체 회사 대표와 노조 대표에 대해 출두할 것을 요구한다. 임·단투 직전에는 임·단투를 조용히 치러 문제가 없을 것을 강요하고, 만약 문제가 있을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도 곁들인다. 임·단투 직후에는 투쟁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불안정해 믿을 수 없다며 2원화, 3원화 조치 및 아이템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한다. 물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다면 이는 재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여진다.

### ② 무쟁의 각서 및 무쟁의 선언 요구

임·단투 직전 혹은 직후에 원청자본으로부터 이러한 협박과 강요를 받은 하청 자본 측은 노조로부터 무쟁의 각서(선언)를 받아내기 위해 혈안이 된다.

“우리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즉, 물량 확보/2원화·3원화 방지/아이템 회수 방지 등을 위해서는) 무쟁의 각서를 원청에 제출해야 한다”며 노조에 대한 애원, 부탁, 회유, 탄압이 일상화된다.

### ③ 노사화합 행사 강요

마찬가지로 2원화, 3원화, 아이템 회수 등을 막아내고, 원청에 노사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노사 화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행사를 진행해 사진을 촬영, 원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개최된 노사 화합 행사에 단지 사진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의 관리자가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기도 한다.

노조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플랭카드만이라도 걸어 놓고 사진을 찍자”고도 하고, 이도 안될 시에는 “사무직만으로 노사화합 행사를 진행해 사진을 찍을 테니 노조에서 눈 감아 달라”고 까지 요구한다.

위의 내용들에 대해 “출두 안하면 그만이고, 무쟁의 각서나 노사화합 행사 거부하면 그만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이를 거부할 시, “회사를 말아먹으려는 놈들”, “2원화, 3원화, 아이템이 회수되어 조합원들은 고용 불안, 생계 불안에 직면하는데도 노조는 자존심만 지킨다”는 식의, 회사측, 심지어 조합원들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사측과의 대화 단절로 일상적인 노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끔 되는 것이다. 신념과 의지를 지닌 집행부라 하더라도 “고용 불안 해소” 등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하청업체 노조들의 현실적 고민이다.

## (2) 불공정 실태로 인해 하청 노조 및 노동자들이 겪는 피해

### ① 납품 단가 인하

예초 설정된 단가에서 매년 평균 전년도 대비 3% 정도의 단가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고 하여 2원화, 3원화된 하청업체들간에 경

정 입찰 방식을 적용, 계속적으로 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거조차 하다.(최근에 주목되는 점으로는 원청내에 하청 부품업체 관리부서를 새로이 만들어 이 부서를 중심으로 하청업체 단가를 무려 30% 인하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한다.)

이 단가 인하는, 실제 내용이 어찌되었든 간에, 하청업체 노조의 임·단투시 사용자 측의 지불능력 부족 주장의 가장 큰 근거로 활용되며, 임·단투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② 2원화, 3원화, 아이템 회수

부품 조달의 다원화가 하청업체간 기술개발, 품질 향상 노력을 배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이미 발주한 아이템까지 회수해 가기까지 한다. 물론 이 대상은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하청업체들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당장 고용 불안, 생계 불안을 걱정해야 하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물량 확보를 고민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나타나게 된다.

### ③ 생산과정에서의 개입

원청자본은 각종 감사를 통해 싸이클타임, 여유 시간, 유동 인원까지 체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의 싸이클타임 단축을 요구하고, 여유 시간, 유동 인원이 많다면 인원감소 요구까지 하고 있다. 결과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 산재사고 빈발, 현장 통제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원청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청자본은 노동자들을 쥐어뜯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사실 위 내용들은 우리 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것이 사실이고, 이의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 자칫 하청 노동조합들이 하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이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나 위 내용들에서 주목하는 점은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현장통제가 강화되고, 산재사고가 빈발하는 등, 하청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피해의 내용들이다.

### (3) 원청노동자로부터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담(?) 행위

원청업체와 하청 업체에서 일한다는 것만 빼고는 한 대의 차를 만들기 위해 연결된 공정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극이

다. 노동자간 단결과 통일을 저해하는 것임에도,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는 데 있다.

원청에 납품을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에게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소위 “배지 꼴려서 일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들(원청노동자)이 마치 상관이나 된 듯이 행동한다”며 원청노동자들을 욕하는 것이다. 검사를 까다롭게 하고, 물량 접수를 늦게 하고 등등….

이것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원청노동자들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면, 하청 노동자들의 불만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고, 술이라도 한 번 대접하면” 이러한 행동이 달라진다면 이는 분명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물론 원청 노동자들 중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소한 행위로 말미암아 같은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을 깨어먹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sup>3)</sup>

#### 4.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투쟁의 원칙 및 방향에 대하여

##### (1) 먼저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개선’이라는 개념의 수정이 필요하다

원-하청간 불공정거래라는 말은 원청자본과 하청자본과의 거래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단가 결정, 단가 인하, 대금 결제 지연 등의 불공정거래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대국 민적 차원에서 볼 때 노동자들이 경제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일정 긍정성을 가질지 모르나, 실제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개선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원청자본과 하청자본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 개선이 아니라, 원청자본이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 노동조합 및 하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들이다. 즉 원청자본의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 간섭 행위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사용해야 할 올바른 투쟁 개념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투쟁’이 아니라, ‘원청자본의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 간섭 저지·분쇄 투쟁’이어야 한다.

3)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경주 지역 자동차부품 노조들은 95년 12월 18일 현대자동차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위에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 상호 공유하며, 이후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선 정도로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 (2) 다음으로 투쟁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공정 거래의 실태를 들어 납품 단가 인하 저지, 대금 결제 개선 등을 노동조합의 주요한 투쟁 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납품 단가 인하, 대금 결제 연장으로 인해 하청 자본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이 모든 피해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납품 단가를 인상 혹은 동결하고, 대금 결제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청자본의 보다 나은 이윤 축적을 보장해 줄 수는 있어도, 이것이 곧바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 혜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청자본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고, 원-하청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위협스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오해의 소지와 더불어 자칫 하청 노동자들로 하여금 하청자본에 대한 환상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임금인상요구서 생계비 원칙을 자본의 지불능력 논리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으며, 임금격차 해소의 방향은 산별 노조 건설이라는 조직적 과제 속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조직적 전망의 원칙을 부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 노조 및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지배, 개입, 간섭 행위라 했다. 무쟁의 각서, 노사화합을 강요하고, 민주노조를 가졌다는 이유로,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2원화, 3원화, 아이템 회수 등을 일삼고 있는 원청의 횡포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생계 불안, 노동강도 강화 등이 주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투쟁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했을 때만이 원청-하청 노동조합간의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의 모색도 찾아질 수 있다.

하청 노조는 무쟁의, 노사 화합 강요 등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노사관계의 자율성마저 침해하는 원청자본에 대한 투쟁을 벌여 나갈 수 있다. 실제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는 하지 못했던 경주 지역 하청부품 노조들은 95년 10월말 현대자동차 자본의 무쟁의, 노사 화합 강요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원청업체 노동조합에서도 원청자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민주노조를 가진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2원화, 3원화, 아이템 회수에 대

한 대응에 있어서도 대응의 1차적 상대는 원청자본이 아니라, 하청 자본이어야 한다.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청 자본의 잘못된 노동조합관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고, 투쟁의 책임은 바로 무성의한 하청 자본에 있을진대, 소위 경영권이라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침을 주장하다 자신들의 책임으로 원청자본으로부터 2원화, 3원화 통보를 받게 되면 부랴부랴 하청 노조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일삼고 있는 하청 자본에게 그 투쟁의 화살이 맞춰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청 노동조합에서는 원청자본의 하청 관리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경영 정보 확보 및 경영참여를 통해 노사관계를 이용해 하청 노동자들을 죽일 수 있는 행위를 감시하고, 그 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산별 노조 건설 이전 기업별 노조 체계 속에서 하청 노조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 낼 수 있는 투쟁 방향이며, 이런 방향 속에서 투쟁이 전개될 때 원-하청 노동자들 간에 단결과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다. 자동차공업협회에 교섭을 요청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여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공감의 실제 내용은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하청자본 살리기 운동, 결국 '노사 화합'의 바람직한 상으로서 자리잡혀질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